

# 9개월 후 간판 내리는 검찰청...‘공소청 권한’ 범위 정리 관건



10월 중수청·공소청 설치 속도...인력 문제는 여전히 우려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검찰청이 9개월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중수청 인력 확보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 운영안 안갯속 공소청  
檢 보완수사권 부여가 관건  
강력 범죄 역량 떨어질 수도  
부실 기소·불기소 반복 우려**

**수사 인력 확보 어려운 중수청  
작년 검사 160여명 ‘줄사표’  
행안부 산하 예고된 인력난  
전산 시스템 구축도 큰 변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권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도 개편의 윤곽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테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중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직급 체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이달 중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검사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

공소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권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보이콧, 금융사기 등 수법이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라며 “경찰이 송부한 자료에만 의존하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부실 기소나 불기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사 지연과 법률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결국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수청 수사 인력·역량 확보 ‘난항’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 확보 역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수청은 출범 전부터 심각한 인력난이 예고된 상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해 11월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0.8%(7명)에 불과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6.1%에 그쳤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난해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도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0년 미만 자연차 검사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인력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사는 수사를 수행하는 법률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일한다”며 “중수청으로 가면 법률가가 아닌 행안부 산하 수사관이 되는 셈이어서 내부적으로 기피 분위기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전산 시스템 문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그는 “검찰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제 막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지청의 한 차장검사도 “중수청이 어떤 범죄를 어느 범위까지 수사하는지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검사들로서는 향후 자신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남아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언 기자 shyoun3@imaeil.com



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 공소청

법무부 산하,  
기소·공소 유지

주요 쟁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 수사

주요 쟁점

직접수사 범위,  
인력 확보 방안

**1**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 이는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

## ‘귀한 몸’ 된 퇴직 경찰관...대형 로펌 영입 줄섰다



경찰, 법조계 수요 폭등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변호사 시장에서 경찰 출신 인력의 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퇴직 경찰관에 대한 법조계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험이 있는 사무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본격화됐으며,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지난해부터 더욱 뚜렷해졌다.

대구의 A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제외한 소속 변호사 4명 전원이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 로펌은 수사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경찰 수사 통합 대응팀’을 운영하며, 조사 과정 모

형사재판 결과 미치는 영향 커  
로펌, 경찰대 출신 변호사 투입  
실무 베테랑 ‘수사 대응팀’ 꾸려  
일각 “또다른 전관예우” 우려도

의 실습과 조사 참여 입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찰 퇴직자 395명 가운데 30%(119명)가 로펌에 취업했거나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1.5%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 직책이었으며, 국장·전문위원·자문위원 등이 6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력을 선호하는 배경으로는 경찰 수사가 형사재판 결과

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꼽힌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B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가 된 이상 로펌들이 경찰 출신 인력을 찾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미 많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나 전문위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러한 흐름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 전문 변호를 표방하는 경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변호는 결국 재판 변호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경찰 출신 변호사 가운데는 변호사 경력이 짧거나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 심문 입회 등 수사 단계

의 절차적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며 실제적 변론과 거리가 먼 대응을 하는 사례도 있다”며 “경찰 재직 경력을 과장해 홍보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력이 사건 유치에 관여하는 경우 역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대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 재직 중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곧바로 퇴직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세금으로 경력을 쌓고 떠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경찰대생들은 최근까지도 등록금과 병역 문제에 국가의 혜택을 받아왔다”며 “경찰대가 로스쿨 진학의 통로처럼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 출신에 대한 선호가 과도해질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언 기자

함께하는 여왕  
도약하는 포항

창의 융합 혁신 포항  
지속가능한 환경친화도시

# AI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도시

☑

## (포항)이 답이다

생태계·인프라 조성

스마트제조 선도모델 구축

디지털 서비스 확산

글로벌 인재양성

po-hang  
포항시